

광주·전남도 노동조합 불법행위 잇단 수사

월레비 강요 타워크레인노조 간부 영장·갈취 혐의 건설노조 간부들 구속 집단폭행 화물연대 조합원 기소 등 수사 속도...노동계 "노조 탄압" 반발

광주·전남 검찰과 경찰이 산업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 불법행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지만 노동계에서는 '노조 탄압'이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4일 공동공갈·공동강요 혐의로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광주 전남동부지회 소속 40대 간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단 가벼운 위반사항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업체들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거된 B씨는 과거 건설업체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8월 조합원 10명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기도 했다.

결국 업체들은 공사 지연으로 인한 비용 부담 보다는 이들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원도 같은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업무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C(52)씨 등 5명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3명은 화물연대 순천지부 소속으로 지난해 11월 25일 광양시 울촌산단 도로에서 승용차를 비조합원의 화물차를 가로막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2명은 여수지부 소속으로 지난해 12월 1일 여수산단 출하장 입구에서 비조합원의 화물차를 멈춰 세운 뒤 육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다. 이들은 특히 피해자에게 신체장애(5급, 우측 하지관절 장애)가 있는지 알려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노동계는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잇따라 타 지역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타 업종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주연 민주노총 광주본부 사무처장은 "정부가 일시적인 지지를 상상을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감압적인 수사 효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 대다수가 노동자라는 점에서 노동자를 억압하는 것은 결국 정부 스스로 자신의 발을 묶는 꼴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맨발로 걸으며 건강 챙겨요
광주 '맨발걷기시민운동본부' 동호회원들이 14일 광주시 서구 풍암호수공원에서 맨발로 산길을 걷고 있다. 맨발걷기는 발바닥이 다양한 자극으로 지압되면서 혈액순환을 돕는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학교급식 종사자들 광주·전남 5명 폐암 확진·30명 의심 진단

미세먼지·노후 환기시설 원인

광주시와 전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종사자 5명이 폐암을 확진받았고 30명은 의심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4개 시·도 교육청의 학교 급식 종사자 2만4652명을 검진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광주에서는 3명이 폐암을 확진받았고 8명이 '의심', '매우 의심' 진단을 받았다. 전남도교육청에서는

2명이 폐암 확진, 22명이 '의심', '매우 의심'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55세 이상 또는 경력 10년 이상 학교급식 종사자다.

폐암 확진자를 포함한 폐암 의심 소견, '경계성 결절', '양성 결절'을 포함하면 광주에서는 검진자 1185명 가운데 327명(27.59%), 전남에서는 2190 중 565명(25.79%)이 폐 이상 소견을 받았다. 경계성 결절은 추가검사가 필요한 대상자이고

양성 결절은 당장 폐암은 아니지만 향후 발병 소지가 있는 이들도 있다.

전국 14개 교육청의 '폐암 의심' 학교급식 종사자는 94명(0.39%), '매우 의심'은 45명(0.19%)으로 폐암 의심 소견이 139명(0.58%)에 달했다.

폐암이 의심되는 학교급식 종사자를 추가 검사한 결과 그중 31명(0.13%)이 폐암을 확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진에서 확진된 인원과 2018~2022년 폐암 진단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29명을 더해 최근 5년간 급식종사자 중 폐암 유병자는 60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급식종사자의 폐암 유병률은 10만명당 135.1명으로, 국가암 등록 통계상 유사 연령의

5년 유병률(122.3명)보다 10.5% 높았다.

이들이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이유는 튀김류 조리 중 발생하는 미세분진(조리흡)과 급식실 노후 환기시설 등 요인이 꼽힌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 최초로 학교급식조리실 작업환경개선 TF를 꾸리고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을 비롯해 2027년 완료를 목표로 학교 조리실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도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기준(근무경력 10년 이상 또는 55세 이상)을 확대해 최근 근무 경력, 나이, 공사립 차별 없이 전체 인원 중 검진을 희망하는 3275명을 대상으로 폐암 검진을 시행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기간 연말까지 연장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 의결로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은 오는 12월31일까지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애초 행안부와 여순사건위원회는 지난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1년을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총 6599건의 신고를 받았다. 그러나 수행인 명부 등 희생자 자료 추가 발굴,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이관 등으로 새로운 신고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기간을 연장했다.

전남지역 거주자는 가까운 시·군,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는 여순사건 신고접수 기간이 연장된 데 따라 텔레비전, 라디오, 다중집합장소 등을 활용해 신고접수 안내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속한 사실조사 및 여순사건 유적지 정비와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여순사건에 대한 오해와 편견 해소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여순사건은 1948년 여수에 주둔하던 군부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비롯됐다.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을 비롯한 전남·북, 경남도 일부 지역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호남권 고속도로 단속 화물차 60% 불법 적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지난해 호남권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단속을 단속한 결과 운행 중인 화물차 60%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고 14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총 65회 단속을 실시해 1713대를 점검했는데, 이 중 61.8%인 1060대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주로 등화장치 안전기준 위반, 후방반사지 불량, 후방안전판 설치 불량 등 문제가 발견됐다.

공단은 불법 행위가 적발된 차량 중 현장에서 처리 가능한 경미한 위반 행위는 현장 계도했으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고발하는 등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올해 연말까지 익산국토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안전감찰을 할 방침이다.

감찰은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화물차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호남권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83명이며, 이 중 화물차 사고는 42명으로 50.6%를 차지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돈돈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